

보도설명자료

(21. 6. 1.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,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(6.1일 문화일보 등)

- ◇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,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- ◇ 현재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는 예측할 수 없음
- ◇ 6.1일 문화일보 <국민에 날아든 '탈원전 청구서' ... 정책 지속엔 稅 부담 눈덩이> 기사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 드립니다.

1. 기사내용

- ① 전력기금으로 탈원전 비용보전을 하게 됨에 따라 향후 국민이 지게 될 부담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전망이다
- ② 원전 7기의 손실은 최소 1조 4천억원대로 추정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- ① 중단된 원전에 대한 사업비용을 전력기금으로 보전할 경우, 전기요금 인상 등 향후 국민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름
 - 비용보전은 이미 구성되어 있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여 집행될 예정이므로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발생하지 않을 것임

* 정부는 지난 2017.10.24. 발표한 '에너지전환 로드맵'에서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'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금 등 여유 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한다'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

- ② 현재 원전별 비용보전 항목 및 금액 등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구체적인 비용보전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음
 - 향후 비용보전 범위 및 절차 등을 규정한 하위규정(고시)이 마련되면,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적법·정당한 비용 여부 등에 대해 비용보전심의위원회(가칭)의 검토를 받아 보전 규모를 결정할 예정임
 - 또한, 비용보전 규모가 결정되면, 전력기금의 여유재원 범위 내에서 국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규모가 확정될 예정임

※ 문의: 김규성 원전산업정책과장(044-203-5320) / 최준근 서기관(5322)
이옥현 전력산업과장(044-203-5150) / 김동욱 주무관(5156)
강경택 전력시장과장(044-203-5170) / 하원석 사무관(5173)